

2023/2024 독일 이민 개혁에 대한 고찰과 그 함의: 제3국 숙련 인력의 이주에 관한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김 숙 경†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지역협력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최대 경제국이자 주요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유사한 위기 상황 속에서 2023/2024년에 대규모 이민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숙련 인력의 유입 확대,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망명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제도 정비를 포괄하는 다층적 조치로, 독일을 현대적 이민 국가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EU 블루 카드 요건 완화, 점수제 기반의 기회 카드 도입, 외국 학위 및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유연화는 제3국 출신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핵심적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방 절차 간소화, 송환 개선법 도입, 복지 혜택 제한 등 더 엄격하고 선별적인 ‘이중 구조’적 접근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독일 이민 개혁의 배경과 주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인구 위기 대응, 노동시장 안정,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 위기 대응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저출산, 고령화, 이민정책, 독일 이민 개혁(2023/2024), 숙련 인력 이주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0304).

† 단독저자 : 김숙경,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강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E-mail : lilyrosekim@pusan.ac.kr

■ 최초투고일 : 2025년 8월 10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월 15일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국력의 쇠퇴는 선진국들의 공통된 우려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0.92명으로 세계은행 조사 대상 200여 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0.75명, 2023년에는 0.7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간 한국 인구는 연간 약 6만 명씩 감소하여 2070년에는 3천 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앙·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¹⁾은 내리막길 일로로 향하여 2021년에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숙경, 2025, 198쪽).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0.2%에서 2050년에는 51.1%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에서 4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60년에는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5% 수준까지 하락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81.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 2020). 랜달 크로즈너(Randall Kroszner, 2024)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지목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가진 한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출산율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 변화도 극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꼽았는데,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주민 유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자녀를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의 이주민 수용은 1980년대 중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4년 8월부터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특례 방문취업제(H-2 비자)²⁾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

1)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국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고용노동부, 2022).

다(김원숙, 2012).

하지만, 전통적으로 ‘순혈주의’, ‘단일민족’의 신념으로 살아온 한국은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정책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응적인 차원에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김숙경, 2020, 184쪽).

한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재, 청년층의 기술직 기피와 열악한 처우와 임금으로 인해 기존 숙련 노동자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재완, 2025). 이러한 구조적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이주민 수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주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이번 개정은 인력난이 심화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하며, 재고용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따라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박상준, 2023).

한편, 독일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독일의 미래,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2023년 새로운 이민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난민들을 수용

하고, 이들을 독일 사회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경험은 이번 개혁의 경험적 기반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번 개혁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숙련 인력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을 현대적인 이민 국가로 재편하기 위한 이번 개혁은 비유럽연합(EU) 출신 근로자의 수를 매년 최대 6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23). 이처럼 독일의 이민 개혁은 자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은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와 저출산, 숙련 노동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독일의 경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 이질적인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독일 사회와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은 성과와 한계는 한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이민정책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 문턱을 낮추고 숙련 인력 유치를 확대하려는 독일 이민 개혁의 배경과 정책 방향,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 노동시장 안정,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정부가 노동 이주민의 수용과 정착·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민 수용에 대한 공론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이주민 통합을 촉진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국내에서 독일의 이민정책을 다룬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박경순(2009), 박명선(2007), 장선희(2014), 장재각(2011) 등의 연구는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주민과의 갈등 양상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주민과의 갈등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둘째, 고상두(2010), 권형진(2014), 안종철(2017) 등은 다문화 사회에서 독일 국적법 개정과 2005년 이민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는 국적법과 이민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법제도의 변화가 사회적 통합 담론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구춘권(2012), 박채복(2007), 한영빈(2015)은 독일의 이민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새로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따른 정책적 흐름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독일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전문 인력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정책과 그 성과를 조명하는 연구(김숙경, 2023; 김현정, 2021; 유진영, 2019)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독일 이민정책의 법제적 변화나 사회통합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미진한 면이 있다. 박진우(2023)는 2023년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귀화를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결속 수단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개혁의 핵심인 제3국 숙련 인력 유치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 또한 독일의 이민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장기적 변화와 국가

간 비교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Douglas(2022)는 독일 연방공화국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이민법과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으며, Bendel(2014), H Adam(2015), Mansour-Ille(2019), N Keller(2015), Ostow(2005) 등은 독일의 주요 이민정책과 이주민 통합을 제도 분석의 틀에서 다루었다. 또한 Green(2013), Kruse(2008), Laubenthal(2019)은 199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민정책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조명하였다. 한편 Alden and Hammarstedt(2014), Duncan(2012), Erol(2022), Gathmann(2014), Sarvimäki(2017), Zimmermann(2007) 등은 2005년 이후 이주정책 자유화 시기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경제적 통합과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2023/2024년 독일의 숙련 인력 중심 이민 개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독일이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이민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독일 이민 개혁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관련 연구와 분석이 진행 중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연구와 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을 중심으로,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추진 배경, 정책 목표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민 개혁의 정책적 의의와 사회통합적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법제·담론 중심 접근을 넘어 이민정책을 국가의 거시적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2. 독일의 이민 개혁

1) 독일 이민정책의 변천 과정

이주민 수용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독일의 이민정책은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 및 경제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수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55년 이탈리아와의 근로자 채용 협정(Anwerbeabkommen)을 시작으로, 독일은 해외 노동자 초청 제도를 도입하며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를 유입하였다. 이 제도는 순환 고용(circular migration)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인력 확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이철용, 2007, 323-324쪽). 그러나 독일은 20세기 후반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 근로자로만 간주했으며, “독일은 이민 국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견지해 왔다(Hammar, 1985, pp. 249-250). 당시 독일의 노동 이주는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고, 필요가 충족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배제되거나 퇴출당했다. 즉, 독일은 실질적으로 이민 국가였음에도 이주민 통합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한편, 냉전 종식과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독일의 경제적 위상과 복지 체계 유지를 위협하자, 독일은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혈통주의적 민족 개념이 뿌리 깊었던 독일 사회의 이주민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임시 근로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공헌자로 바뀌게 했다(Green, 2013, p. 36).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도적으로도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당시 연방

내무장관 오토 실리(Otto Schilly) 주도로 통과된 국적법 개정은,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기반한 독일의 국적(Staatsangehörigkeit) 부여 체계에 부분적으로 출생지주의(jus soli) 요소를 도입한 제도적 전환점이었다. 이 개정에 따라,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일정 요건(부모 중 최소 1인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 또는 영주권 보유)을 충족할 경우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이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한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진전을 의미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결정적 분기점은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이다. 이법은 기존의 외국인 체류법, EU 시민의 자유이동법(Freizügigkeitsgesetz / EU), 망명법, 국적법 등 주요 이민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편하여, 이민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적 틀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은 ‘이민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Bendel, 2014). 또한 이민법은 EU 비회원국 출신 숙련 인력에게 합법적 이주 경로를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독일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BAMF, 2005). 이후 2020년 3월 1일, 독일은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 인력이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FEG)’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제3국 출신 숙련 노동자의 입국과 취업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Bundesregierung, 2020). 이러한 입법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환이자, 난민 위기 이후 ‘경제적 이민’의 필요성이 공론화된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

서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민정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재생에너지, 건설, 의료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은 노동시장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프 솔츠(Olaf Scholz)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녹색당(Grüne)·자유민주당(FDP) 연립정부는 2021년 12월 연정 합의를 통해 이민법 및 국적법의 개혁을 공식화하였다. 이어서 2022년 11월, 연방정부는 ‘제3국 숙련인력 이주에 관한 기본방향(Eckpunkte zur Fachkräfteeinwanderung aus Drittstaaten)’을 발표하여, 이민 개혁 의제를 제시하였고, 2023년 3월에는 이를 구체화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다(Auswärtiges Amt, 2022). 이후 2023년 말과 2024년 초부터 개정된 법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독일은 숙련 인력 확보와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Simsek, 2023).

2) 이민 개혁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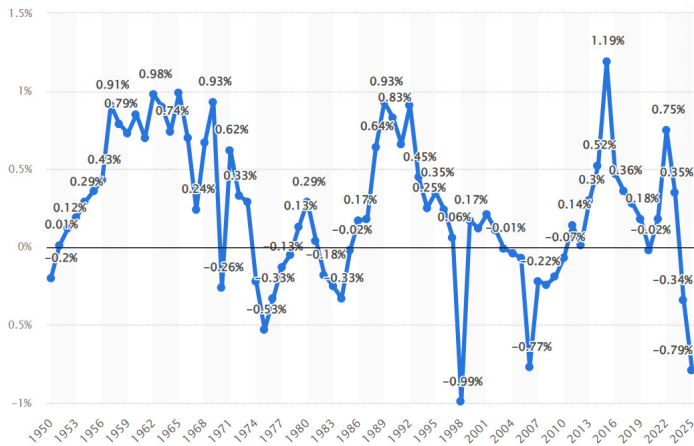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적 필요,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인구 구조 측면에서 고령화의 심화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독일 정부가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도록 만든 핵심적 배경이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추세와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육아·출산 지원 정책이 서독식 제도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구동독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공백이 크게 발생했다. 여기에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졌고, 1994년 동독의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인당 약 0.77명까지 하락하였다(Reuters, 2021).³⁾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 경제 성장과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혜택과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이민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적 이민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 시리아와 다른 곳에서 온 백만 명이 넘는 젊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약 89만 명의 난민이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이었다(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6). 이로 인해, 2015년 독일의 순이주는 약 114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1950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Destatis, 2023). 이 같은 대규모 유입은 독일의 인구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14년 8천80만 명이었던 독일의 총인구는 2016년 8천2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자연증가보다는 국제 이주였다. 특히, 난민 유입 이후인 2016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상승했는데, 독일 여성의 출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비독일 여성의 출산율은 무려 25%

3) 1994년 독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함.



<그림 1> 독일 연간 인구 변화(1950-2025)

출처: Population growth in Germany, Statista,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39388/population-growth-in-germany/>

급증하면서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OECD, 2017).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던 독일의 인구 구조에 일정 부분 완충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난민 유입이 집중되었던 시기 동안 경제 지표 또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은 2015년 1.7%에서 2016년 2.23%, 2017년에는 2.5%로 상승하였고,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 역시 2016년 4.12%에서 2017년 3.75%, 2018년 3.38%, 2019년 3.04%로 꾸준히 감소했다. 독일은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연방 재정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다(Trines, 2019). 이러한 경험은 난민과 이주인이 독일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2023/2024년 이민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나타난 출산율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면서 초기 효과가 점차 약화되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기적으로 독일 여성의 출산율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적응 과정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Riphahn & Mayer, 2010). 이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2.3명에서 2019년 2.1명으로 낮아졌고,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Reuters, 2021).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이는 소위 인구 대체율⁴⁾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은퇴자 수 증가에 비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uters, 2021). 독일 중앙은행은 은퇴 인력을 대체할 젊은 층이 부족해지면

서 2030년대 중반부터 경제 성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이 없는 경우 2060년까지 독일의 노동력은 현재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를 보완하려면 향후 40년 동안 매년 최소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CGTN, 2021). 실제로 2022년 독일은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력 부족을 겪었으며, 전체 기업의 56%가 인력난을 호소했다. 독일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연구소(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74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이었으며, 특히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⁵⁾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Localize, 2023). 독일은 정밀가공, 기계, IT 등 고숙련 기술 기반 산업에 강점을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 정보 기술, 재생 에너지,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기술직 기피, 인구 감소, 정년퇴직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국내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이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Destatis, 2023).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은 노동력 확보와 인구구조 대응이라는 경제적 필요 외에도,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사회·정치

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독일 사회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자리해 왔으며, 초기의 ‘환영 문화(Welcoming Culture)’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후퇴하였다. 난민 수용에 따른 치안 불안, 문화적 충돌, 정체성 위기 등의 문제 제기가 증가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는 일부 주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특히, 2024년 8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졸링겐(Solingen)의 한 축제에서 발생한 시리아 난민에 의한 흉기 사건⁶⁾은 난민 관련 범죄에 대한 공포를 다시 자극하였으며, 올라프 숄츠 총리는 불법 이민 및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추방 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Le Monde, 2024).

정치권 내에서도 이민정책에 대한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 사회당(CSU)은 망명 요건의 강화, 가족 초청 제한, 국경통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집권 연립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사회민주당(SPD)은 정치적 부담 속에서 보충적 보호 지위자의 가족 재결합을 2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수용하였고, 자유민주당(FDP) 역시 망명 신청자에 대한 통제 강화에 찬성하였다. 반면, 녹색당은 해당 조치들이 유럽 인권협약(ECHR)과 아동 권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Migrando.de, 2024).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단지 정치권 내 논쟁의

4)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의 수준을 인구대체율이라고 하며 OECD 및 UN의 기준으로는 약 2.1명이다.

5)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는 숙련 노동자(Fachkraft)보다 높은 학문적·전문적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보통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숙련(Fachkraft) 인력은 특정 전문 영역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대학·직업교육훈련(Ausbildung) 이수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상용 경력 보유자)을 의미. 본 글에서는 ‘숙련 인력’과 ‘전문 인력’을 병행 사용.

6) 용의자는 이슬람 국가(IS)와 관련된 시리아 난민으로, 이 사건으로 3명 사망, 8명이 부상당함.

결과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여론 역시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를 점차 바꿔 나갔다. 예컨대 2015년 4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난민 수용 확대에 찬성했으나, 같은 해 10월에는 응답자의 51%가 난민 증가에 대해 '우려된다'고 답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Deutsche Welle, 2015). 이어 2016년 티엔에스-엠니드(TNS-Emnid)의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인의 60%가 난민 수용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제한적 수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Deutsche Welle, 2016). 이러한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23년 인프라테스트-디맵(Infratest-dimap) 조사에서는 독일인의 52%가 난민 수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숙련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40%가 찬성하는 등 '난민 수용'과 '기술 이민'에 대한 여론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Deutsche Welle, 2023). 결국 독일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이민 심사 강화,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추방 절차 개선, 기술 인력 중심의 선별적 이민 확대 등 다층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이민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개편을 넘어, 급변하는 정치 환경과 이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결정이기도 하다.

3) 2023/2024년 이민 개혁의 주요 정책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독일 연방정부는 숙련 인력 확보, 사회통합 강화, 이민 절차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이민 관련 주요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번 이민 개혁의 주요 내용을 정책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솔츠 행정부가 추진한 이번 개혁은 다층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과 체류법(Aufenthaltsgesetz)의 개정과 함께 난민·망명 제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민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현대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독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되며, 정책 목표와 이민 절차, 사회통합 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입법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편은 특히 EU 역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국 및 취업 요건을 완화하고, 이민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Villas, 2022). 이러한 조치는 독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독일 이민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1) 숙련 인력 이민의 확대 및 제도 개편

독일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특히 2020년에 시행된 '전문인력이주법(FEG)'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체류 및 취업 절차와 이민 요건을 완화하였고, 2022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3국 숙련인력 이주에 관한 기본방향(Eckpunkte zur Fachkräfteeinwanderung aus Drittstaaten)'은 취업 비자 체계와 이민 절차의 전면적 개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전문인력이주촉진법(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이 제정되었다(Bundesgesetzblatt, 2023). 이 개정법은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주요 조항은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의 핵심은 외국 학위와 자격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독일 내 취업이 가능한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점수제 기반의 ‘기회 카드(Chancenkarte)’를 포함한 새로운 체류 경로를 도입하며, ‘서유럽 발칸 국가 규정(Westbalkanregelung)’을 통해 비 EU 국가 출신 숙련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상한 인원과 절차를 완화한 것에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인정된 학위가 있어야만 이민을 허용하던 독일의 제한적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비EU 출신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기대하며, 현대적인 이민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Euronews, 2023).

① EU 블루 카드(Blue Card) 제도의 확대

2023년 말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연합(EU) 출신 시민은 약 459만 8천6백 명(전체 인구의 5.5%)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독일의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같은 시점 비EU 출신 시민은 약 771만 5천 명(전체 인구의 9.1%)에 이르렀으며, 이 중 약 41만 9천 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중 약 11만 3천 명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U 블루 카드(EU Blue Card) 소지자로, 이는 전체 취업 체류자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인도(약 3만 3천 명), 러시아(약 1만 명), 튀르키예(약 8천 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약 2만 3천 명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이다(Germany Visa, 2023).

이러한 통계는 독일이 EU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숙련 인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EU 블루 카드는 EU 외부 고숙련 노동자(hochqualifizierte Fachkräfte)⁷⁾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체류 허가 유형으로, 소지자에게는 발급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2023/2024년 독일의 이민 개혁을 통해 연방정부는 EU 블루 카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블루 카드 발급 대상 직군이 확대되고 최소 연봉 요건이 인하되었으며, 기존에 학위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자격 범위가 직업교육 이수자 등 다양한 숙련 인력까지 포함되도록 조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독일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에게만 블루 카드가 발급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전통적 학위 외에도 졸업 후 3년 이내 취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IT 분야에서는 정규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독일어 능력 요건도 면제되는 등 제도가 한층 유연하게 개편되었다. 아울러 EU 블루 카드 발급을 위한 연봉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2025년 기준, 일반 직종의 경우 연간 총액 €48,300(세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 직업군(수학, 자연과학, 의료, 보육 등)과 IT 전문가는 연간 총액 €43,759.80(세전)으로 완화되었다(Germany.info, 2024). 또한, 블루 카드 제도는 전공과 실제 직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⁸⁾ 직무 선택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가족 초청 절차 또한 간소

7) 독일 체류법(Aufenthaltsgesetz) §18g (Blaue Karte EU)에 따르면, EU 블루카드는 고숙련 제3국 국민에게 발급된다(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G] §18g, n.d.).

8) 단, 이 규정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규제 직종에 한해 적용됨.

화되어 블루 카드 소지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더욱 쉽게 독일로 동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전문인력이주촉진법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숙련 인력의 가족 재결합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다. 개정 전에는 가족 초청 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충분한 소득과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갖추면 부모 및 시부모를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18g AufenthG). 다만 부모·시부모의 생계는 사회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해당 의무 이행 선언서를 제출하고 부모를 독일 법정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Fragomen Policy Paper, Sept. 2024). 더불어, 개정 전에는 가족 초청 시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A1 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외국인 취업자가(예: §18a, §18b AufenthG 적용 대상자 포함) 독일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독일어 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가족 동반 이주가 한층 용이해졌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2024a). 이러한 요건 완화는 고숙련 인력의 독일 정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며, 가족 중심의 안정된 체류를 통해 노동시장 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숙련 인재 유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독일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② 기회 카드(Chancenkarte) 제도의 도입

2024년 6월부터 독일은 캐나다의 점수제 모델을 기초로 설계된 ‘기회 카드(Chancenkarte, Opportunity Card)’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캐나다를 직접 방

문하여 이민 제도의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BMI, 2023). 기회 카드는 독일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고용계약 중심 체류 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이 독일 내에서 직접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수제 기반 체류 허가 제도이다. 기회 카드 소지자는 최대 1년간 독일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수습 근무나 시간제 근무가 허용된다. 또한, 체류 중 현지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자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일반 취업비자 또는 EU 블루 카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Guten Tag Korea, 2023).

기회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독일 내 합법적 체류 상태여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직업 교육(Berufsausbildung) 또는 정규 대학 학위를 완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업·훈련 과정을 마쳐야 한다. 또한, 독일어 능력 A1 수준 이상 또는 영어 능력 B2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점수제 평가(총 14점 만점)에서 최소 6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평가 항목에는 학력, 직업 경력, 언어 능력, 연령, 독일 내 체류 경험, 독일 내 자격 인정, 그리고 함께 이주하는 배우자 관련 요건 등이 포함된다(<표 1> 참조).

기회 카드 제도 도입은 기존의 학력 및 고용계약 중심의 경직된 취업 허가 방식에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잠재력을 지닌 외국 인재에게 폭넓은 진입 기회를 제공하려는 독일 이민정책의 확장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해외 인재 유치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독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

<표 1> 기회 카드 점수제 평가 항목별 기준

| 항목 | 세부 기준(최소 6점 필요) | 점수 |
|---------|--|-------|
| 학력 및 경력 | 외국 전문 자격 부분 인정 / 규제 직종(예: 교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 4점 |
| | 최근 7년 중 해당 직종 5년 이상 경력 | 3점 |
| | 최근 5년 중 해당 직종 2년 이상 경력 | 2점 |
| | MINT ⁹⁾ , IT, 간호, 교육 등 인력 부족 직종 자격 보유 | 1점 |
| 언어 능력 | 독일어 B2 수준 이상 | 3점 |
| | 독일어 B1 수준 | 2점 |
| | 독일어 A1 - A2 수준 | 1점 |
| | 영어 C1 수준 이상 | 추가 1점 |
| 나이 | 만 35세 이하 | 2점 |
| | 만 40세 이하 | 1점 |
| 독일 연관성 |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체류 경험(학업, 취업) | 1점 |
| 배우자 조건 | 배우자의 학력 및 경력 | 추가 1점 |

* 각 항목별 점수 기준은 기회 카드 공식 웹사이트(<https://chancenkarte.com/en/>)에 근거하여 작성됨.

환과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행 초기인 2024년 하반기까지 기회 카드 발급 건수는 약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수가 IT, 엔지니어링, 간호, 숙련 제조업 등의 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분석된다(Fragomen, 2024).

다만, 제도 운영의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장기 취업 성과나 정착률에 대한 평가는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외국 숙련 인력의 독일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일 내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면 출신국에서 취득한 직업 자격이 독일 기준에 부합

하는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재의 노동시장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자격 불일치로 인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이주촉진법’은 자격 인정 제도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도입하였다. 우선, 비규제 직종에서 자국 내 최소 2년의 직업교육과 최근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독일 내 별도의 자격 인정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해졌다(Bundesregierung, 2024). 이는 기존의 이원화 제도(Duales System)¹⁰⁾에 기반한 엄격한 자격 인정 절차를 완화하여, 자격의 ‘형식적 일치’보다 ‘실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입된 ‘인정 파트너십(Recognition Partnership, § 16d Abs. 3 AufenthG)’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점에 자격 인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더라

9) MINT는 독일에서 과학·기술 인력 정책(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기술공학)을 논할 때 자주 쓰이는 약어임.

10) 학생들이 학교의 이론 교육과 기업에서의 실무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업교육훈련 제도임.

도, 독일 도착 후 고용주와 함께 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완료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제도는 행정적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인력 수급이 시급한 산업 분야에서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체류 허가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고용계약서, 최소 2년 이상의 국가 공인 직업 자격 또는 학위, 그리고 독일어 A2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Arbeitsagentur, 2024). 이처럼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는 단순한 입국 요건 완화의 차원을 넘어, 독일 노동시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이민 경로를 제도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독일이 숙련 인력 확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 확장과 제도적 정착 여부가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수급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④ 노동 이민의 범주 확장: 서발칸 규정의 상설화 및 쿼터 확대

2023년 말 기준, 독일에는 대학 학위 또는 직업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의 다수가 취업 목적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이들 중 학위 기반 숙련 인력은 약 4만 9천 명으로, 주요 출신 국가는 인도(6천 명), 중국(4천 명), 튀르키예(3천 명)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훈련을 이수한 숙련 인력의 경우, 약 5만 2천 명이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였다. 이들의 주요 출신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필리핀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독일이 고등교육 이수자에 국

한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거친 숙련 인력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다층적 숙련 인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내용 외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독일 내에서는 서발칸 국가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약 7만 6천 명의 서발칸 출신 근로자들이 ‘서발칸 규정(Western Balkans Regulation)¹¹⁾에 따라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제정된 서발칸 규정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코소보 등 서발칸 6개국 출신 국민이 특정 조건 하에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제도이다. 이 중 코소보 출신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말 기준 약 2만 명이 독일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Germany Visa, 2023). 2016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상설화되었으며, 연간 승인 한도는 기존 약 2만 5천 명에서 최대 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대상 국적자의 경우 자격 인정이 필요 없는 비규제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고숙련 노동자와 달리 특별한 전문 자격 요건 없이도 노동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이러한 제도 운용은 독일의 노동력 확보 전략이 단지 EU 역내 및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지역 출신의 비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자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2) 국적법 개정과 시민권 확대

독일 거주 인구의 약 14%는 독일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약 1천200만 명에 해당한

11) 외국인 고용 조례 제26조 제2항 (BeschV) (Section 26 para. 2 of the Ordinance o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BeschV).

다. 이들 중 약 530만 명은 최소 10년 이상 독일에 거주해 온 장기 체류자이지만, 귀화 자격이 있음에도 실제로 귀화를 신청하는 비율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독일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인 16만 8천5백45명으로, 이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인 약 3.1%에 불과하다. 독일의 귀화율은 1.1%로 EU 평균인 2.0%보다 낮은 수준이다(Deutsche Welle, 2024).

이와 같은 국적 취득의 제약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3년 11월 1일 ‘국적법 현대화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rechts, StARModG)’ 초안을 연방하원(Bundestag)에 제출하였다. 이후 2024년 6월 27일, 해당 법의 대부분 조항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독일을 통합적 이민 사회로 재정립하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국적 허용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점이다. 종전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다국적 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적 선택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Bundesregierung, 2024). 이에 따라 독일 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독일 국적을 취득할 때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입양되는 미성년자 역시 입양으로 인해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Auswärtiges Amt, 2025).

연방정부는 복수 국적의 원칙적 허용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어 온 국적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다수의 이민자

가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출신국과의 사회적·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복수 국적 허용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적 취득 접근성을 확대하여, 독일 사회 내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귀화 요건 완화

귀화 요건은 이번 개정에서 대폭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최소 8년의 합법적 체류가 요구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 체류 요건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독일어 능력(B1 또는 C1), 생계유지 역량, 민주적 가치 수용 등 기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히 고령이 된 손님노동자(Gastarbeiter)에게는 구두시험 허용 등 절차적 유연성도 제공된다(Deutscher Bundestag, 2023).

이러한 요건 완화의 영향으로, 2024년 독일에서는 29만 1천9백55명이 국적을 취득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시리아 출신이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그 외 터키, 이라크, 러시아 등의 이주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Reuters, 2025). 이는 제도 개정 이전부터 이미 귀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완화가 귀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③ 출생에 의한 자동 국적 취득 확대

독일은 전통적으로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적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는 제한적 속지주의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2014년 개정

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일 국적과 부모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선택 의무(Optionspflicht)’가 폐지되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2024년 국적법 현대화법(StARModG)¹²⁾ 개정에서는 숙주주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부모 중 한 명이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독일에서 출생한 아동은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23). 이로써 이민자 가정 2세의 국적 취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이민자의 법적 지위 안정성과 사회 통합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번 제도 개편은 독일 정부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이 아닌, 법적·사회적 포용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보수 정당 및 언론은 귀화 기준 완화가 국적의 상징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Welt, 2024). 특히, 귀화 기간 단축이 통합의 실질적 성과 없이 법적 지위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적법 개정은 독일이 현대적 이민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민자의 정치적 권리 강화와 사회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체류법 개정 및 이민 행정의 현대화

2022년 12월,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의 체류법(Aufenthaltsgesetz)과 망명법(Asylgesetz)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체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체류법에 기회체류권(Chancen-

Aufenthaltsrecht, §104c AufenthG)을 도입하였다(BMI, 2023a).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독일 내에서 ‘용인된 체류(Duldung)’¹³⁾ 신분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정 요건(예: 근로 지속성, 일정 기간 이상의 독일 체류, 범죄 이력 부재 등)을 충족할 경우 정식 체류 허가 및 장기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Bundestag Drucksache 20/6000, 2023). 이는 사실상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온 이들에게 제도적 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이들의 영주권 취득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이민 행정의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 전환 및 절차 간소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류 허가 신청, 자격 심사, 정보 처리 등 행정 절차 전반의 전산화를 목표로,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n)’의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포털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 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사용자 중심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적·기술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우선,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접근법 개정안(OZG 2.0,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Onlinezugangsgesetzes)’은 연방·주·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앙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이민·체류 행정에 관한 절차를 디지털화 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전자 서명 및 인증 체계의 통합을 통해

12) Staatsangehörigkeitsmodernisierungsgesetz, StARModG

13) 체류 허가가 없지만, 강제 퇴거가 일정 기간 행정적 ‘유예’된 상태임.

신청자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MI, 2024). 이와 연계하여, 신청자는 연방정부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BundID)’를 통해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상태 조회 등 각종 이민 관련 절차를 단일 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은 독일 전자신분증(eID) 기능과 연동되어 있어 인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 이민자 모두가 안전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는 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원칙(Once-Only-Prinzip)’에 따라,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이 이민 행정에도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 등록, 자격 증명서, 고용정보 등은 연방 및 지방기관 간 자동 연동되어, 신청자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노동 허가 절차에서 큰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EU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2020). 이와 더불어, ‘디지털화 실험실(Digitalisierungslabore)’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외국인청 업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한 현장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 실험실은 연방디지털서비스청(DigitalService des Bundes)이 주도하며, 이민자, 행정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연

방정부는 ‘Migration/Eine & Auswanderung’ 포털을 통해 비자, 체류, 귀화, 귀환 등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이민 절차, 필요 서류 목록, 신청 방법 등 실질적인 안내를 포함하며, 다국어 지원과 개별 상황에 맞춘 자동 정보 안내 기능을 갖추어 초기 이민자의 신속한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AMF, 2024).

이와 같은 전면적 디지털화는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특히 노동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체류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BMI, 2023b).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전산화 차원을 넘어, 독일 이민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구조적 현대화를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적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망명 신청자 및 불법체류자 제도의 정비

2023/2024년 독일 이민 개혁의 주요 축 중 하나는 망명¹⁴⁾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도 정비이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독일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이후 이들을 자국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 망명 신청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 가중, 일부 이주민 관련 범죄 사건 등이 정치권과 여론의 우려를 높이면서, 정부는 망명 신청자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와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난민과 이주민 통합

14) 지급카드 도입, 복지 축소, 심사 속도 개선 및 추방, 구금 연장 등 절차적·복지 관련 조치들은 망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뿐 아니라, 최근 독일 경제의 둔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에 전년 대비 0.3%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0.2% 하락하며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여, 기술적 경기 침체(technical recession)¹⁵⁾ 국면에 진입하였다. 2025년에도 GDP 증가는 정체되거나 0.1-0.2% 수준의 미미한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Reuters, 2025). 이러한 경기 둔화는 공공재정 운용과 노동시장 안정성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곧 망명 신청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 귀화 요건의 재조정, 통합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의 신속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및 강제송환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수단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추방 및 구금 연장

2024년 1월 독일 연방하원에서 일명 ‘송환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ückführung)’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불법체류자 및 망명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10일이었던 ‘강제추방 구금(Ausreisegewahrsam)’ 기간을 최대 28일로 연장하였다. 다만,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여전히 사전 통보가 요구된다. 이 조치는 추방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이주자의 도주 가능성을 줄이고, 추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독일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이민법 집행은 무의미한 선언이

아닌 현실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eutscher Bundestag, 2024). 이에 대해 일부 인권 단체 및 야당은 독일 기본법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의 위헌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Mediendienst Integration, 2024).

② 망명 심사 절차 개선

독일은 2023년 이후 망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관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였다. 과거에는 체류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데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신속심사 절차(Schnellverfahren)를 도입하였으며, 안전한 제3국을 경유하거나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사례 등, 기각 가능성이 높은 망명 신청에 대해 단축된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한 결정과 즉각적인 송환¹⁶⁾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 경찰과 외국인청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에 대해 즉각적인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문서 확인 절차도 디지털화되었다(Bundesregierung, 2024).

이러한 제도 개편은 불확실한 체류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자격이 없는 신청자는 신속히 송환하며,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보다 빠른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구조를 정비한 것이다. 이는 망명 신청자 수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

15) 경제학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라 한다.

16)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의 추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되었고, 2023년 약 7천8백 명이 추방됨.

치료, 독일이 난민 유입에 대해 더 이상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자격 요건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범죄자 추방 기준 강화

범죄 외국인에 대한 추방 기준은 이번 개정에서 대폭 강화되었다.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추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조직범죄, 마약 거래, 밀입국 알선 등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별도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The Times, 2024; Financial Times, 2024). 이러한 조치는 2023년 줄링겐에서 발생한 외국인 이주자의 흉기 범죄 사건 이후 강경 여론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④ 선불 결제 카드 도입과 복지제도 개편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11월 주 정부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망명 신청자 및 특정 보호 지위 부여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을 대체하는 선불 결제 카드(Bezahlkarte für Asylbewerber)를 도입하였다.¹⁷⁾ 이 제도는 일정 금액의 선불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되, 사용처를 제한하여 지원금의 해외 송금 및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주¹⁸⁾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Diakonie Deutschland, 2024). 이러한 조치는 망명 신청자 지원제도에서 ‘현금성’ 혜택을 최소화하여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히 난민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가족

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금성 급여 제한 조치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복지 수급 요건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망명 신청자 유입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의 경우 기존에는 18개월 이후 지급되던 복지 수당이 앞으로는 최소 3년 체류 후에야 지급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 시 식비 항목이 공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Diakonie, 2024).

3. 종합적 평가와 함의

2023/2024년 독일의 이민 개혁은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전면적 제도 개편으로, 독일 이민정책의 기존 방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은 숙련 인력 유입 확대, 복수국적 허용, 망명 및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의 정비 등 다층적 제도 변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독일을 지속 가능한 ‘현대적 이민 국가’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의 핵심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EU 블루 카드 요건 완화, 기회 카드 도입, 외국 학위 및 직업 자격 인정 절차의 유연화 등은 제3국 출신 숙련 인력에게 보다 다양한 이주 경로를 제공하고, 가족 재결합 요건 완화를 통해 장기 정착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귀화 요건 완화와 복수국적 허용은 이민을 단기적 인력 확보 수단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재정립하려는 정책

17) 간단히 Bezahlkarte (결제 카드)라고도 줄여서 사용.

18) 2024년 2월 함부르크를 시작으로 13개 주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임.

기조를 보여준다.

반면, 체류 자격이 없는 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방 절차의 강화, 복지 혜택의 제한, 그리고 송환 개선법의 도입 등을 통해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는 한편, 자격과 역량을 갖춘 숙련 난민에 대해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특히 연방 노동청은 ‘난민 고용(Geflüchtete beschäftigen)’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난민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인턴십·직업훈련·재교육 등을 통해 직업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는 난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일 경제의 잠재적 인적 자원으로 재편하려는 실용적 접근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이와 같은 ‘이중 구조’적 접근은 이민정책과 난민정책 전반에 적용되며, 인도주의적 원칙과 노동시장 현실주의를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용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숙련 인력의 유입 확대는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민자의 장기적 정착과 사회통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조치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인권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며, 국제적 규범, 특히 유럽연합의 가치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EU 가입 및 통합의 기본 조건으로서 제시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 소수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며, 이는 회원국의 이민·난민 정책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준거로 기능해 왔다.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이자 난민 수용의 선도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번 이민 개혁에서도 독일은 한편으로는 숙련 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면서도, 망명·난민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제적 보호 의무와 인권 원칙의 최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예컨대 가족 재결합 요건 완화, 귀화 요건 완화, 복수국적 허용 등의 조치는 이민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추방 절차 강화, 사회복지 혜택의 제한, 선불카드 제도 도입 등은 인도주의적 가치와 상충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EU 및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이민 개혁은 자국 내 제도 개편에 국한되지 않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외부 국경 관리 강화, 난민 분담 메커니즘의 재조정 등 유럽 전체의 이민·망명 정책 전반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련 인력 중심의 유입 전략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에게 정책적 벤치마킹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웨덴 등 일부 회원국은 독일의 개혁 기조와 유사한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독일의 통제적 조치는 회원국 간 난민 분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난민 수용 부담이 집중되는 남유럽 국가들과의 정책 조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독일 이민 개혁의 장기적 성패는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다문화 사회 구조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기반한 사회통합 전략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인권 보호,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간의 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인

권을 유럽통합의 핵심 가치로 규정해온 EU 체제 내에서, 독일의 개혁은 하나의 정책적 모델이자 시험대가 될 수 있으며, 그 향방은 향후 유럽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중대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국가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경험은 한국에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독일은 이민을 단순한 인력 충원의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장기적인 인구 예측에 기반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유치하고, 이를 출산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독일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이민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장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확립해 왔다. 한국 역시 이주민을 단순히 경제적 필요에 따른 수용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독일의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recht*) 개혁과 복수국적 허용은 이민자의 사회적 정착과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장기적 통합 전략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민

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국적 취득 제도 및 정치적 권리 확대에 관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이 겪는 사회적 갈등과 반이민 정서는 한국의 향후 이민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독일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민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숙련 인력을 효과적으로 선별·유치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이민정책을 단기적인 노동력 확보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 존중, 사회적 연대를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는 인권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2023/2024년 이민 개혁은 단순한 법·제도 개편을 넘어, 국가 정체성, 인구 전략, 노동시장 정책의 전면적 재구성을 의미한다. 유럽 차원에서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대응 방식과 숙련 인력 유치 모델의 기준을 재정의하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들에게는 이민을 장기 전략으로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향후 독일 이민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EU 차원의 제도적 조율 과정은 글로벌 이민정책의 향방에 중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 역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상두 (2010).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421-443.
고용노동부 (20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540.

- 고용노동부 (20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408.
-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지역연구>, 21(1), 119-154.
- 권형진 (2014). 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통일인문학>, 57, 125-160.
- 기획재정부 (2020). 2020~2026 장기재정전망, 정책뉴스.
- 김숙경 (2020). MIPEX를 통해 본 프랑스 이주민통합정책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31(4), 181-205.
- 김숙경 (2023). 난민 위기 이후 독일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고찰. <로컬리티 인문학>, 30, 175-206.
- 김숙경 (2025).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출산율에 대한 고찰과 함의. <로컬리티 인문학>, 33(6), 197-236.
- 김원숙 (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2012(04).
- 김현정 (2021).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민족연구>, 78, 35-60.
- 박경순 (2009). 세계화와 이민정책: 독일의 2005년 『이민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9(2), 113-140.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271-303.
- 박진우 (2022). 제3국 전문인력의 유치와 관련된 독일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과 동향: 전문인력이민법을 중심으로 <독어독문학>, 63(3), 91-116.
- 박채복 (2007). 독일의 이주자 정책. <사회과학논총>, 17(1), 293-320.
- 안종철 (2017). 탈냉전 이후 독일의 시민권제도와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적법과 이민법을 중심으로. <史叢(사총)>, 90, 221-253.
- 유진영 (2019). 독일의 이민법 개정 배경과 실리적 선택: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한국독어독문학과 육학회>, 75(75), 393-416.
- 이철용 (2010).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321-350.
- 장선희 (2014).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독일 이민법을 중심으로. <통권 82호>, 55(4), 31-58.
- 정재각 (2011).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1), 79-106
- 한영빈 (2015). 독일의 이주통합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과에 대한 고찰. <다문화사회연구>, 8(1), 39-70.
- Alden, E., & Hammarstedt, M. (2014). Labor market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erman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7(3), 721-750.
- B. Laubenthal (2019). Refugees Welcome? Reforms of German Asylum Policies Between 2013 and 2017 and Germany's Transformation into an Immigration Country. *German Politics*, 28(3), 412-425.
- BAMF. (2005). Das Zuwanderungsgesetz.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Bendel, P. (2014). Zuwanderungsgesetz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4(3-4), 24-30.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Chancenkarte - Neue Möglichkeiten für qualifizierte Drittstaatsangehörige. Bundesagentur für Arbeit.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Chancenkarte - Neue Möglichkeiten für qualifizierte Drittstaatsangehörige.

- Nürnberg: Bundesagentur für Arbeit.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Geflüchtete beschäftigen: Informationen für Unternehmen*. Nürnberg: Bundesagentur für Arbeit. Retrieved October 27, 2025.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2016). *Das Bundesamt in Zahlen 2015*.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BAMF). (2024). *Digitalisierung der Migrationsverwaltung: Fortschrittsbericht 2024*. Nürnberg: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6). *Das Bundesamt in Zahlen 2015*. Nürnberg: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3). *Modernisierung des Fachkräfteeinwanderungsrechts*. Berlin: BMI.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23). *Fachkräfteeinwanderung weiterentwickeln*. Berli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Bundesregierung. (2020).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Neue Regelungen ab März 2020*. Berlin: Bundesregierung.
- Deutscher Bundestag. (2023).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elung des aufenthaltsrechtlichen Status von Ausländern (BT-Drs. 20/6000)*. Berlin: Deutscher Bundestag.
- Duncan, N. T. (2012). Moving Toward “Modern” Immigration Policy. In *Immigration Policymaking in the Global Era 107-127*. Springer.
- Erol, I., & Unal, U. (2022). Employment effects of immigration to Germany in the period of migration policy liberalization, 2005-2018. *Eurasian Economic Review*, 12, 531-565.
- Gathmann, C., & Keller, N. (2014). Returns to Citizenship? Evidence from Germany’s Recent Immigration Reform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738.
- Green, S. (2013). Germany: A Changing Country of Immigration. *German Politics*, 22(3), 333-351.
- H. Adam (2015). Xenophobia, asylum seekers, and immigration policies in Germany.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21(4), 446-464.
- Hammar, Tomas. (1985). *European Immigration Policy: A Comparative Study*,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usmeyer, D. B., & Papademetriou, D. G. (2022). *Immigration Polic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gotiating Membership and Remaking the Nation*. De Gruyter.
- Kruse, I. (2008). *Of States, Rights, and Social Closure: Governing Immigration in Germany*. Springer.
- Laubenthal, B. (2019). Immigration policy modernization in Germany. *German Politics*, 28(4), 487-508.
- Mansour-Ille, D. (2019). 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ies in contemporary Germany. *European Review*, 27(3), 375-400.
- N. Keller, C. Gathmann, & O. Monscheuer (2015). Citizenship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Evidence from Germany’s immigration reforms. econstor.eu.

- OECD.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 Ostow, J. (2005). German immigration policy in the post-unification era. *Migration Studies*, 3(1), 21-50.
- Papademetriou, D. G. (2022). *Immigration polic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gotiating membership and remaking the nation*. New York: Berghahn.
- Riphahn, R. T., & Mayer, J. (2000). Fertility assimilation of immigrants: Evidence from count data model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3(2), 241-261. Springer; European Society for Population Economics.
- Sarvimäki, M. (2017). Labor market assimilation of immigrants in German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6(3), 1-25.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3). *Bevölkerung am Jahresende nach Bundesländern*. Statistisches Bundesamt.
- Trines, S. (2019). The state of refugee integration in Germany in 2019. *Humanitarian Issues*.
- Zimmermann, K. F., Bonin, H., Hinte, H., & Fahr, R. (2007). *Immigration policy and the labor market: The German experience and lessons for Europe*. Springer.

<신문, 잡지사>

- 김상진 (2023.8.29). “노인 붙잡아야 경제성장” 독일 시니어 고용 70% 돌파, 배경 셋 [시니어 고용]. [On-line], Availabl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130>
- [On-line],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09115>
- 박상준 (2023.11.25). 세븐일레븐이 한국에 주는 경고. 동아일보, 오피니언. [On-line], Available: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13/121660166/2>
- 이재완 (2025.1.6).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한국 앞 놓인 과제. 오마이 뉴스. [On-line], Available: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057
- Financial Times. (2024). *Berlin Tightens Deportation Rules after Solingen Stabbing Incident*.
- Le Monde. (2024). *In Solingen, Olaf Scholz promises to speed up expulsions*.
- Reuters. (2021, May 13). *Births slow in China, US; ex-laggard Germany bucks trend*. [On-line], Available: <https://www.reuters.com/world/births-slow-china-us-ex-laggard-germany-bucks-trend-2021-05-13/>
- Reuters. (2023, March 29). *Germany unveils immigration reform plan to tackle labour shortages*. [On-line], Available: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unveils-immigration-reform-plan-tackle-labour-shortages-2023-03-29/>
- Reuters. (2025, February 26). *New German government must quickly address faltering growth, Bundesbank says*. Reuters.
- Reuters. (2025, June 10). *Germany granted citizenship to a record number of people in 2024, led by*

Syrians. [On-line]. Available:

https://www.reuters.com/world/germany-granted-citizenship-record-number-people-2024-led-by-syrians-2025-06-10/?utm_source=chatgpt.com

The Times. (2024). *Germany to Expel Foreign Criminals under New Migration Law*. [On-line], Available:

<https://www.thetimes.co.uk>

<인터넷>

Auswärtiges Amt. (2022, November 30). *Visa und Aufenthalt*, Available:

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visa-und-aufenthalt/2566504-2566504?utm_source=chatgpt.com

Auswärtiges Amt. (2025, August 07). *Tag der offenen Tür im Auswärtigen Amt - Einladung zum Staatsbesuch*. Available: <https://www.auswaertiges-amt.de>

BMI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2023).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 Available: <https://www.gesetze-im-internet.de/>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February 20). *Skilled Immigration Act: Stage 2 with Simplifications for Experienced Workers*. Available:

<https://www.arbeitsagentur.de/en/press/2024-07-skilled-immigration-act-stage-2-with-simplifications-for-experienced-workers>

Bundesgesetzblatt. (2023). *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kräfteeinwanderung*, Available:

https://www.recht.bund.de/bgbl/1/2023/217/VO.html?utm_source=chatgpt.c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2023b). *Modernisierung des Einwanderungsrechts durch Verwaltungsvereinfachung*. Available: <https://www.bmi.bund.de>

Bundesregierung. (2024, June 3).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Neue Wege zur Fachkräftegewinnung*. Availab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fachkraefteeinwanderungsgesetz-2182168>

Bundesregierung. (2024, March 26). *Modernisi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rechts*. Availab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modernisation-citizenship-law-2254382>

Bundesregierung. (2024, January 17). *Rückführungspaket*. Availabl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ueckfuehrungspaket-2229830>

CGTN. (2019, February 14). *Migrant labor may be the easiest solution for falling birthrates*, Available:

https://news.cgtn.com/news/3d3d514e7a676a4e32457a6333566d54/share_amp.html

Chancenkarte. (n.d.). *Working in Germany with the Opportunity Card*. Available:

https://chancenkarte.com/en/candidates/?utm_source=chatgpt.com

Deutsche Welle. (2015, October 2). *Poll notes rise in fear of refugees*. Available:

<https://www.dw.com/en/german-poll-notes-rise-in-fears-over-refugee-influx/a-18757023>

- Deutsche Welle. (2016, September 16). *Poll shows support for cap on refugees*. Available: <https://www.dw.com/en/opinion-poll-shows-60-percent-of-germans-want-a-cap-on-refugees/a-19557256>
- Deutsche Welle. (2023, May 5). *Germans want tougher EU asylum procedures*. Available: <https://www.dw.com/en/germans-want-tougher-eu-asylum-procedures/a-65526498>
- Deutsche Welle. (2024, January 19). *Germany Reforms Citizenship Law*. Available: https://www.dw.com/en/germany-reforms-citizenship-law/a-63987066?utm_source
- Deutscher Bundestag. (2023, December 12). *Pressemitteilung - Staatsangehörigkeit*. Available: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3/kw50-pa-inneres-staatsangehoerigkeit-981332>
- Deutscher Bundestag. (2024, January 18). *Bundestag stimmt Gesetz zur Verbesserung von Rückführungen zu*. Available: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4/kw03-de-rueckfuehrung-986284?utm_source=chatgpt.com
- Diakonie Deutschland. (2024, January 17). *Faktenpapier: Eingeschränkte gesundheitliche Versorgung für Asylsuchende für 36 statt für 18 Monate*. Available: https://www.diakonie.de/informieren/infothek/2024/januar/faktenpapier-eingeschraenkte-gesundheitliche-versorgung-fuer-asylsuchende-fuer-36-statt-fuer-18-monate?utm_source=chatgpt.com
- Euronews. (2023, October 16). *Skilled workers are in demand as Germany tackles labour shortage with new points-based visa*. Available: <https://www.euronews.com/travel/2023/10/16/skilled-workers-are-in-demand-as-germany-tackles-labour-shortage-with-new-points-based-visa>
- European Commission. (2020, November 5). *The Once Only Principle System: A breakthrough for the EU's Digital Single Market*. Available: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once-only-principle-system-breakthrough-eus-digital-single-market-2020-11-05_
- Federal Employment Agency. (2024, February 20). *Skilled Immigration Act: Stage 2 with simplifications for experienced workers*. Available: <https://www.arbeitsagentur.de/en/press/2024-07-skilled-immigration-act-stage-2-with-simplifications-for-experienced-workers>
-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BMI). (2023, March). *Travel to Canada: Visit by the Federal Ministers of the Interior and Labour*. Available: <https://www.bmi.bund.de/SharedDocs/kurzmeldungen/EN/2023/03/travel-kanada.html>
- Fragomen. (2024, May 29). *Germany: 'Opportunity Card' to Commence from June 1, 2024*. Available: <https://www.fragomen.com/insights/germany-opportunity-card-to-commence-from-june-1-2024>

4.html

Germany Visa. (2023, December 7). *419,000 labour migrants were working in Germany at the end of 2023*. Available:

<https://www.germany-visa.org/news/419000-labour-migrants-were-working-in-germany-at-the-end-of-2023/>

Germany.info. (2024). *National Visa for Employment – EU Blue Card*. Available:

https://www.germany.info/resource/blob/2435484/ac4c3cfa8a1147a2e4709b9f9d0617be/eu-blue-card-data.pdf?utm_source=chatgpt.com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G]. (n.d.). § 18g *Blaue Karte EU*. Available: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18g.html

gutentagkorea. (2023.12.29). 2023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독일의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 정리. Available: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89621>

Library of Congress. (2023, December 4). *Germany: Government Proposes Reform of Citizenship Law*. Available: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3-12-04/germany-government-proposes-reform-of-citizenship-law/?utm_source=chatgpt.com

Localize UK LTD. (2023, July). *What employers should know about Germany's new immigration law*. Available:

<https://www.localize.com/blog/what-employers-should-know-about-germanys-new-immigration-law>

Mediendienst Integration. (2024). *Abschiebungen und freiwillige Ausreisen*. Available:

<https://mediendienst-integration.de/migration/flucht-asyl/abschiebungen.html>

Migrando.de. (2024). *Bundestag uneins beim Aussetzen des Familiennachzugs*. Retrieved November 10, 2025, from <https://www.migrando.de>

Schmidt, A. (2024, September 15). *Fragomen Policy Paper: Family Reunion Visa Options for Parents in Germany*. Available:

<https://www.fragomen.com/insights/fragomen-policy-paper-family-reunion-visa-options-for-parents-in-germany.html>

Simsek, A. (2023, January 2). *Germany needs to reform its immigration laws: Expert*, Available:

<https://www.aa.com.tr/en/europe/germany-needs-to-reform-its-immigration-laws-expert/2775908>

Statista. (2024). *Population growth in Germany*. Retrieved November 10, 2025,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39388/population-growth-in-germany/>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5, July 17). Decline in fertility rate slowed significantly in 2024.

Available:

https://www.destatis.de/EN/Themes/Society-Environment/Population/Births/_node.html

Tagesschau. (2024, January 17). *Bezahlkarte statt Bargeld - Neue Regelung für Asylbewerber*. Available: <https://www.tagesschau.de/inland/bezahlkarte-121.html>

Villas, A. M. (2022, December 7). *Germany is planning to reform its immigration policies. The U.S. should, too*. Available:

<https://reason.com/2022/12/07/germany-is-planning-to-reform-its-immigration-policies-the-u-s-should-too/>

Welt. (2024, April 5). *Einbürgerung: „Befördert illegale Einwanderung“-Union kritisiert Tweet des Auswärtigen Amts*.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50861174/Einbuering-Befor-dert-illegale-Einwa-nderung-Union-kritisiert-Tweet-des-Auswaertigen-Amts.html>

A Study on the 2023/2024 German Immigration Reform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Immigration Policies for Skilled Workers from Third Countries

Sookkyong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is facing a structural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s because of persistent low fertility and rapid aging, underscoring the need for immigration policy reforms. Germany, the largest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and a major host of refugees, encountered similar challenges and implemented a large-scale immigration reform in 2023/2024. The reform combines multiple measures expanding skilled labor inflows, the easing of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restructuring asylum and irregular migration management, aiming to reposition Germany as a modern immigration state. The key initiatives include relaxed EU Blue Card criteria, introduction of the points-based Opportunity Card, and streamlined recognition of foreign degrees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o facilitate the entry of skilled migrants into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Germany adopts a more selective "dual-structure" approach toward asylum seekers and undocumented migrants by expediting deportation procedures, enacting the Repatriation Improvement Act, and reducing welfare benefit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key policy changes of Germany's immigration reform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for addr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stabilizing the labor market, and advanc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uilding on this analysis, this study offers insights for design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to respond to its demographic crisis and secure a skilled workforce.

Keywords: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Immigration Policy, German Immigration Reform (2023/2024), Skilled Labor Migration